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정 은 주(Jung Eun Ju)
조선대학교/초빙객원교수
jansort55@gmail.com

세계적인 장기불황과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대내외 경제여건 뿐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도 변화된 모습들을 접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어느덧 익숙해진 공유경제라는 개념인데, 최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목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유경제가 부상하고 어느덧 10여년의 시간동안 이어져왔지만 적용에 있어 확실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어 공유경제의 효과와 적용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적용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함

키워드: 공유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갈등, 사회적 가치, 공유광주

1. 공유경제 이해

1) 공유경제 등장배경과 개념

공유경제 등장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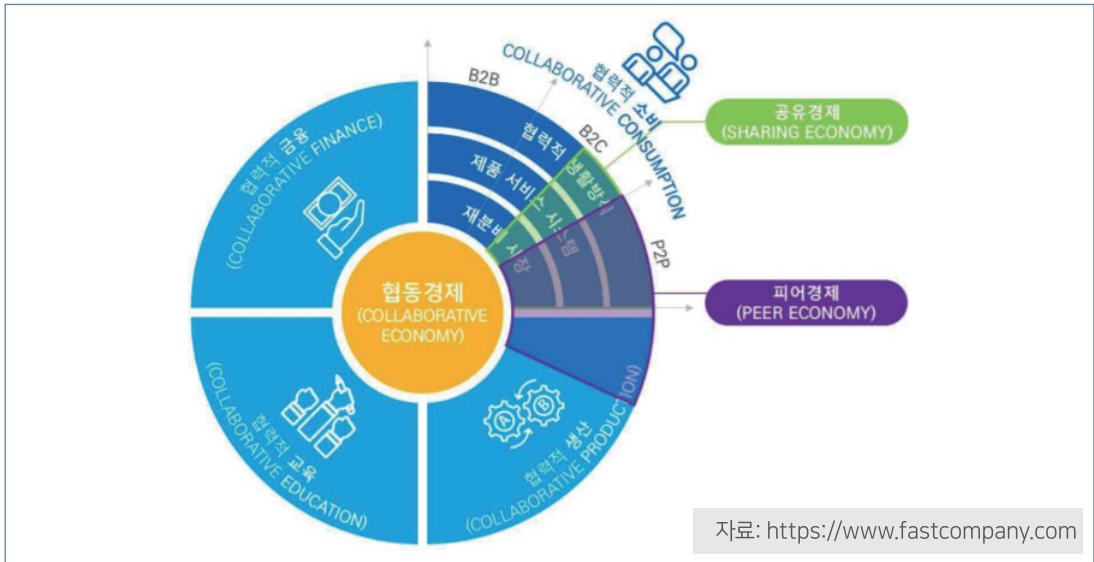
- 기술혁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한계비용이 제로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더 이상 재화를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자본주의 시스템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공유경제가 대안으로 부상하게 됨
-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소유에서 공유로 생활상이 변화되면서 문화로 발전 되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됨
- 일상의 변화와 함께 인터넷, 모바일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경제적 환경, 정보통신기술 발전, 신산업 발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함
-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경제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감소된 소득과 고용기회를 유희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수익으로 극복하고자 함
-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면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대중에게 알려지고 확산되어 오고 있지만, 공유경제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공유경제에 대한 다양한 정의

- 물건, 공간, 서비스 등 이용률이 낮은 자산을 대상으로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이득을 위해 공유하는 경제모델이라고 함(Botsman, 2013)
- 소비, 생산, 금융 등 제반 경제활동 중 소비에 국한해 제품, 서비스를 소유하는 대신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 발견하는 것이 공유경제라고 함
- 인터넷 비즈니스 기반의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와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혼합된 형태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되었다고 함(Lessig, 2008)
- 대중에게 알려진 공유경제는 광의적으로 ‘군중기반 자본주의’¹⁾로 혼용(Sundardjan, 2016)되기도 하며 협동경제(Collaborative Economy)와도 비슷함

1) 군중기반 자본주의는 시장거래를 기반으로 자본의 영향력 강화, 군중 기반 네트워크, 사적/전문적 서비스 간 모호한 경계, 일과 여유시간 간 모호한 경계 등을 특징으로 함

| 그림 1 | 협동경제와 공유경제



- 공유경제를 정의하는 국내의 연구자들은 공유경제를 정의할 때 공통적인 핵심 키워드로 “유휴자산, ICT플랫폼, 사회적 관계, 경제활동”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고 있음
- 이를 토대로 공유경제를 정의한다면, ‘유휴자산을 ICT플랫폼 기반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중시되는 경제활동으로 이끌어내는 활동’으로 정의 가능함

2) 비즈니스 측면에서 공유경제 동향

- 스마트폰과 SNS 대중화로 정보 공유가 용이해지면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평판을 통한 주체들 간 소통이 쉬워지면서 공유문화가 비즈니스로 확산됨
- 현재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민간부분의 소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상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를 시도하고 있음
- 기존 공유경제 모델의 주요 활동은 협력적 소비(Cooperative Consumption)와 P2P(Peer To Peer)거래, B2C(Business To Consumer)거래 형태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음
- 세계시장과 대비해 국내시장 규모는 미약하나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서비스 이용 만족도도 높아 향후 수요 확대 전망이 우세함²⁾(산학연, 2016)

2) 산학연, 16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유경제 소비자 중 20~30대의 55%가 공유경제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고, 40대 이상에서도 64.7%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공유경제에 참여한 경험자들 중 77.8%가 향후 지속적으로 공유경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3) 공유도시 모델로 확장

- 국외 사례에서는 주로 비즈니스 모델로 운용되고 있는 공유경제를 민간부문 뿐 아니라 공공차원으로 활용하여 공유경제 취지와 효과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대안경제로 부상하기 시작한 공유경제 개념은 도시 발전을 위한 공유도시로 확장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 광주, 대전 등에서 공유도시를 표방함
- 공유도시는 물건, 공간, 시간, 재능 등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공유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도시로 정의함
- 광주광역시는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의 협업을 통해 공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를 공유도시로 정의하고 있고, 서울시는 공유도시 목적으로 ①유휴자원의 효율적 활용 ②커뮤니티 활성화 ③지역경제 활성화 ④환경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음³⁾

표 1 | 공유도시 여건 수준 및 필요수준 분석을 위한 지표

구분	분석변수	변수설명
공유도시여건 수준	공유서비스	자동차, 주거 공간, 사무실 및 회의실, 물건
	공유 공간	차없는 거리, 공원·녹지·광장 면적, 공공시설 개방, 문화체육시설
	공유 기반	정보통신 인프라, 교통인프라, 공유관련 제도, 사회적 기업 등 경제기반
공유 필요수준	도시낙후도, 주거수준, 저소득층 비율, 의료보육시설 수준	

자료: 장윤배 외(2017), 공유도시 지표설정을 통한 공유도시 수준의 지역적 분포특성 분석-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52(3)

4) 공유경제 적용의 양면성

- 공유경제 영향과 효과에 있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지만 커뮤니티 기반의 공유경제와 비즈니스 기반의 공유경제 영역 모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사회적 갈등 유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 둘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

3) 서울특별시(2013), 공유도시 서울기반 조성

긍정적인 기대효과

- **신규거래 창출** : 수요자에게 각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함, 또한 기존 공급자 위주 경제시스템에서는 운용시간에 따른 제한이 있으나, 공유경제 시스템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소비자 후생 증가** : 다양한 경제 플랫폼을 통한 경제활동은 공급자와 수요자간 서비스 양과 질 측면에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됨. 또한 유휴자원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 자원의 낭비를 줄여 사회전체의 공동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에서 대안적 사회운동의 특성도 있음
-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적 기회 증대** : 취약계층의 경우 주로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특성이 있는데 이들이 유휴자본을 활용해 자본이득의 혜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노인 등 기존 경제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 배려 계층의 소득증대와 경제적인 안정성에 기여하게 됨
- **환경 문제 개선** : 유휴자원을 경제활동 영역으로 유인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자원을 생산하지 않아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효과 있음
- **사회적 자본 활성화와 공동체 의식 제고** : 지역사회 내 상호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자발적 참여와 소통, 협력의 사회적 자본⁴⁾이 활성화 됨. 사회적 관계가 증시되는 공유경제에서는 공동체의 평판이 중요하고 한번 형성된 평판은 ICT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각 집단과 사회 간 커뮤니티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함

공유경제 우려와 문제점

- **기존 업체와의 마찰로 인한 사회적 갈등** :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업체의 사업성 악화와 규제로 인해 신규 공유경제 기업이 구축되는 현상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함
- **기존 사업자와 공유경제 참여자 간 형평성 문제** : 규제, 세금 등에서 기존 사업자와 공유경제 참여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직업 안전성 저해** : 정규직 직원이 줄어들고 독립 계약자, 프리랜서 등이 늘어나게 되는 고용시장의 변화는 경제주체로서 개인이 하나의 직업만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노동법과 보험 등 보호 장치가 작용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함
- **공유경제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소비자 피해 우려** : 제도적 기반과 현실 경제의 급속한 변화가 동반되지 않아 신분 확인, 서비스 품질 사전확인 불가, 신뢰성 부족 등은 공유경제에 참여하

4) 사회적자본이란 협력적 행위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점을 가져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putnam, 1993)

지 않은 이유로 지적되고 있음⁵⁾

- 공유경제 업체들의 경영부실로 인한 사회적 낭비 우려 : 수익 모델 유무, 관련 규제 변화, 관리 비용,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의식 등 공유경제 기업의 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속가능성 담보가 어려워 경영부실로 이어진 사례에 대한 사회적 낭비 우려가 있음

2. 국내외 공유경제 현황과 한계점

1) 국내 공유경제 현황

제한적 적용과 규모

- 전 세계적으로 숙박, 차량 공유 등 민간경제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차량공유의 경우 우버 택시로 알려진 P2P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B2P거래(쏘카, 그린카 등)만 가능한 상황임
- 우리나라 공유경제규모는 연간 GDP의 0.005%(한국은행 2017년 추정치)에 머물러 있으며, 저조한 원인으로는 높은 규제 장벽과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이 꼽히고 있음⁶⁾
- 기존 업체의 경우 공유경제 스타트업 기업과 업무협력을 체결하거나 지분 투자를 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경영효율성에도 기여하는 상생 전략을 모색하기도 함

상생협력을 위한 공유경제 활성화 전략

- 공유경제 관련 기존 사업자와 공유경제 사업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상생협력을 이끌어내고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처하는 전략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5) 기획재정부, 2019,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서비스산업 혁신III)

6)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7), KB지식비타민 2017-68호, p.5.

표 2 |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전략

분야	내용	소관부처
숙박	도시민박업 제도화	문체부
	농어촌 우수 민박업 선정 및 홍보지원	농림부
	불법 숙박업소 주기적 단속	복지부
교통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내 카셰어링 배차자율, 카셰어링 세제지원 확대, 온라인 플랫폼전세버스탑승자모집, 한정면허제도 수요자진화개선	국토부
공간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	법무부
	공공자원 개방시스템구축,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지자체 공유공간 조성 지원	행안부
	공공부문 해외사무소 공간예약플랫폼 구축	중기부
금융·지식등 기타	P2P대출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크라우드 펀딩 규제 개선	금융위
	P2P대출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인하	기재부
	K-MOOC를 통한 재능공유 촉진	교육부
과세체계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 기준 마련	기재부
	공유경제 납세 가이드라인 마련	국세청
종사자·소비자보호	O2O서비스 공급자의 신고의무 부담완화	공정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 확대, 산재보험 체계정비	고용부
공유기업혁신지원	기업 활용 데이터 확대, 플랫폼경제 조사기반구축	과기정통부
	플랫폼기업 연구, 개발 세제지원 강화	기재부

자료: 경제활력대책회의자료(2019)정리내용

2) 국외 주요도시의 공유경제 현황

표 3 | 국외 도시 공유경제 적용 현황

	역할	예시	위치
지역 노력 ↓	역할 없음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 : 물물교환	여러 도시
	지방정부의 적은 노력	공동체 주도	촉진 역할
	감독	에어비앤비(Airbnb)의 영향	여러 도시
마을 노력	재고	공동체 공유 자산	포틀랜드, 플래그스태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패트릭 페레이드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 마일수송을 우버로 진행 공동체 공유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 SNS, 도시간행물 	달라스, 포틀랜드, 플래그스태프, 헤네피 카운티

	역할	예시	위치
적 인 노 력 ↓ 만 연 노 력	기금	공구 도서관	캐나다 밴쿠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팝업스토어 • 공립도서관·지역문화센터에 공구 도서관 확보 • 'The Sharing Project'를 통한 연구 	뉴욕 여러 도시 밴쿠버
	소규모 정책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친 인큐베이터 (공유주방서비스) • 단기 숙박시설 임대 허가 시스템 및 법령 	토론토 포틀랜드, 오스틴
	소집	지방정부 직원들은 포틀랜드주립대, 소마 에코 지구, 지역연합에 모여 재사용 범위 측정	포틀랜드
	파트너/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Resourceful은 LocalWork, GoodWill과 파트너 • Bayshare는 재난관리국(DEM)과 파트너 • 교외교통센터 정류장을 위한 Carsharing파트너십 	플래그스태프, 샌프란시스코 등 여러 도시
	지방정부의 중간 수준 노력	대비 조치	도시 주도
	교육/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x-It Clinic 운영 방법 • 똑똑하게 구매·재사용·임대·공유·수리·유지하기 등에 관한 블로그 및 페이스북 게시글 	헤네펜 카운티 포틀랜드, 플래그스태프
	지지	도시는 라이드소싱 규제가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지	텍사스 휴스턴
	개발계획	(저개발) 통합 이동성 계획	미국내 도시들 - Shared Use Mobility Center지침에 따름
		대규모 정책조정	단기 임대 허가 시스템 및 법령
지방정부의 많은 노력		시행 조치	도시 주도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셰어링에 시정부 동참 • 교통업을 위한 도시데이터 공유 • 새로운 제설업 촉진 	여러 도시 뉴욕시; 포틀랜드 캐나다 몬트리올
p/g,서비스 개발		리소스풀 PDX	포틀랜드
시설·인프라 개선		카셰어링 단체 대상 전기충전소	밴쿠버
소유		바이크쉐어	여러 도시
규제		단기 임대 및 라이드 소싱	여러 도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임대 규제 • 라이드소싱 규제 	뉴욕시 등 휴스턴 등

자료: One Earth, Local Governments and the Sharing Economy roadmap(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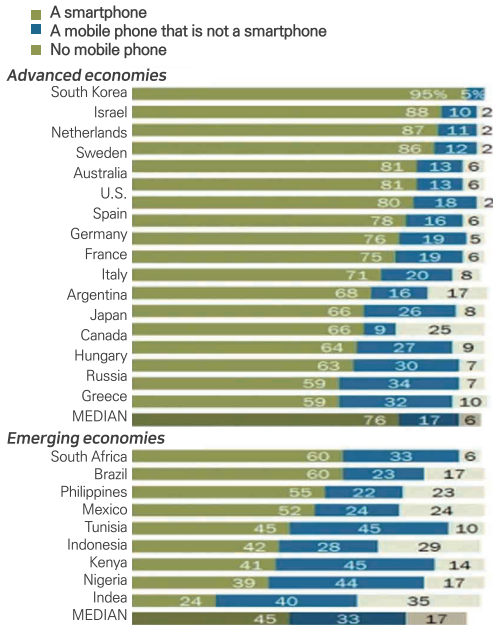
3) 공유경제 적용에 있어 지방도시의 한계점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요구되는 공유경제

■ 대형도시 중심의 물적 자원 구축

- 공유경제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폰 보급률에 있어 세계 50억 명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은 2018년 기준 스마트폰 보급률 95%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음⁷⁾. 신흥국 젊은 계층과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꾸준히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어 공유경제 기반이 확대되고 있음
- 국내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 기술의 발전, 스마트폰 대중화, 소셜 네트워크 이용 확산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비즈니스 측면의 공유경제 서비스는 수도권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지방도시로까지 파급되는데 시간이 소요됨
- AI, 빅데이터 등 ICT 기반은 공유경제 활성화의 조건인데 이들 기반시설은 인구나 자본이 집중되고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어 인구감소와 산업재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도시의 경우 비즈니스 측면의 공유경제 확대에 있어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기 어려움

| 그림 2 | 스마트폰 보급률



| 그림 3 | AI 범용성



7) Pew Research Center(2019), Global Attitudes & Trends, Smartphone Ownership Is Growing Rapidly Around the World, but Not Always Equally,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19/02/05/>

■ 대도시 중심의 인적 자원과 기회

- 도시성장발전은 다양성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유경제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 자원이 풍부한 대도시가 선호됨
- 재능과 시간 등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소기반의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 비즈니스 측면의 공유경제가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이 넓고 사업간 연계와 확장가능성이 넓은 대도시나 인적, 물적 기반이 집적된 공간이 갖추어진 곳이 경쟁력 측면에서 우세함

지방 도시의 공유경제 적용 한계점

■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의 한계성

-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 법적 테두리 내 허용되는 범위에서 신산업 육성과 성장 동력 마련이라는 명제로 공공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실질적인 규제 철폐와 경제적 지원 등은 불가능한 상황
- 지자체에서도 공유경제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 복지서비스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 중 하나로 공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음
- 공유경제 육성을 위해 공공공간과 자원 공유, 공유문화 캠페인, 유희자원 활용 아이디어 발굴, 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공유기업 인증 등 기존 업체와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함

■ 시장의 협소화로 인한 공유경제 기업 성장의 한계

- 지방도시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시장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공유경제 참여기업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사업규모에서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려움

광주광역시 공유경제 현황과 한계점

■ 광주광역시 공유문화도시 현황

- 2013년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 당시 참여혁신단 업무였으나, 2019년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타시도의 경우에도 공유경제 접근 방식에 따라 경제진흥과,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주민자치과, 공동체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2015년 공유도시 추진계획 수립 당시부터 행정이 선도하고 민간이 실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공유광주(<http://공유광주.kr>) 공유포털 사이트 운영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선정해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2016년부터 대표 공유단체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지정되면 3년 동안 공유광주 로고 사용권, 광주시 공유관련 행사 우선 참여권 등을 주고, 기업, 단체, 마을공동체에겐 최고 20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펴고 있음

표 4 | 광주광역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선정 요건

구분	주요 내용
지정대상	공유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유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제2조2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활동 조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지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사회문제의 범위 •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단, 공유촉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현재 주된 활동이 광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자료: 광주광역시 2016년 공유단체기업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지원 사업공고문

■ 한계점

- 광주광역시 공유지원 제도와 사업추진의 목적을 마을공동체 회복과 도시재생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한정화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사업으로 연결시키는데 미흡함
- 공유문화도시를 표방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보다는 공동체 문화 회복과 자원·자산의 활용 극대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공유광주의 경우 물품, 공간, 정보, 지식 나눔을 하고 있으나 자치구 등 타 기관과의 업무 중첩성, 공동체 활동과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업무와의 차별성 부재 등을 문제로 제시할 수 있음
- 급속히 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경제가 도입되었으나 신기술, 신산업과의 연계성, 대안 제시 등의 기능이 미흡함
-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공유기업 및 단체 선정, 지원 등 사업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기업과 기존 공동체조직 등 비영리기관의 사업목적에 공유라는 이름을 덧입힌다면 선정이 가능한 반면, 일반 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게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은 미흡함

3.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언

- 지속적인 공유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공유 네트워크와 제도 구축을 통해 공유문화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 인구감소 추세, 인프라 부족이라는 지방도시 여건의 한계성으로 공유기업 육성과 지속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
 - 지역성과 고유성으로 무장한 공유경제 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대내외 경제활동과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활동 등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생활 속 민원이나 지역 현안 문제 해결방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문화로 정착시키는 전략 필요
 - 지역 공유경제 기업을 브랜드화하고 공유사업을 홍보하여 공유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 공유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
- 기존 시장과의 갈등유발보다 새로운 파이를 키우는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방향
 - 국내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콘텐츠 구성은 미흡한 상황이어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 관련 지원이 요구됨
 - 특히 웹 정보를 통해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여건에서 대형자본의 장점으로 꼽히는 편리함과 정보의 방대함은 자칫 지역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공유경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공부문에서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민간의 자원을 공유경제 테두리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
 - 지역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상품개발과 홍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비즈니스 측면의 공유경제 적용
 - AI 선도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광역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 정보가 누적된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
 - 도심지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IOT기술을 접목한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거나, 신규로 조성되는 첨단3지구, 빛그린산단 등에 첨단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경제를 접목한 테스트베드와 리빙랩, 규제완화지역 등을 조성
 - 기존 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공유경제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기업과 관련 단체 네트워크 지원이 요구됨
 - 광주광역시 경제자유구역⁸⁾지정 계획, AI선도도시, 광주형 자동차 공장 등과 연계한 공유경제 사업 기회에 대한 홍보와 지원 등을 통해 첨단기술을 대중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8) 경제자유구역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보장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